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63호
2016. 6. 6

정책동향

- 공공공사 공기 연장 비용 분쟁의 쟁점
- 건설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필요

시장동향

- 5월 CBSI, 전월 대비 7.1p 하락한 78.5

산업정보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역할 확대 필요
- 드론과 건설산업

건설논단

- 민자사업 본연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공공공사 공기 연장 비용 분쟁의 쟁점

- 공기 연장 비용 떠넘기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공정 거래 -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은 발주기관의 귀책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정과 달리 공공 발주기관의 공기 연장 비용 지급 거부는 관행이 되어 왔으며, 이는 대표적인 공공 기관 불공정 사례로 언급됨.
 -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 실태조사¹⁾에서 발주 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현장은 29%에 불과했으며, 반면 시공사가 조정을 포기하거나 발주 기관이 조정을 미승인한 현장은 67%에 달했음.
 - 공사 기간의 연장은 사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공기 연장의 귀책이 건설사에 있을 경우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음. 하지만 발주기관 귀책의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손실 비용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 건설사들은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상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사는 대부분의 경우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을 감내하며 발주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하나,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기 연장 비용에 대한 정당한 지급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지급 관련 분쟁의 쟁점

- 발주자 귀책의 공기 연장에 대한 관련 판례를²⁾ 살펴보면, ① 공사 기간 연장의 귀책, ② 계약 금액 청구 절차, ③ 공기 지연 비용 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이 나타나고 있음.
- 먼저, 공기 연장 관련 분쟁은 공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누구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

1) 이영환·김원태(2013),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2012가합66261, 2013나202006, 2012가합100658.

에서부터 시작되며, 예산 부족, 발주처 요청 공사 중단, 용지 보상 및 인·허가 지연,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은 발주 기관의 명확한 귀책 사유로 인정됨.

- 계약금액 청구 절차와 관련한 쟁점은 계약 금액 조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와 공시기간에 대한 변경 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 청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로 구분됨.
 - 공기 연장에 대한 변경 계약 체결 및 합의서에 계약 금액이 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다수 발주기관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으로 주장함.
 - 하지만 사례 판결에서는 건설사가 준공 대가 수령 전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적합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공기 지연 비용 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인력투입계획서나 제3기관의 감정 평가 등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갖출 경우 추가 비용을 보상받도록 하고 있음.
 - 사례 판례들은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연손해금 등 건설사가 제기한 대부분의 추가 비용을 인정함.
- 즉, 최근의 공공공사 공기 연장 관련 판례에서는 건설사가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지키고, 추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면 건설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보상받겠다고 할 수 있음.

■ 개선 방향

- 건설사는 분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는 드물.
 - 수년에 걸친 분쟁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설사나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은 공기 연장 비용 보상을 포기하게 됨.
- 따라서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제도적으로는 모호하거나 발주자의 임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이 해결되어야 하며, 총사업비관리지침 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물가 변동에 대한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이 당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공기 연장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건설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필요

■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마련³⁾

-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관련 세제 지원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상속 재산⁴⁾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임.

■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500억까지 상속 공제와 증여세 절감 가능

-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生前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임⁵⁾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표1> 가업승계 공제 요건

요건	기 준	내 용
가업	중소기업 ⁶⁾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⁷⁾
	중견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계속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주식 보유 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업(상장법인은 30%이 상)
피상속인 ⁸⁾	대표이사 재직 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또는 10년 이상 재직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3)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4)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개인 가업 사업용 재산과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등 법인가업 상속재산으로 구분(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

5)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 상이(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6)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상호출자 제한 기업, 채무보증 제한 기업, 비영리 기업 제외)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건설업(F),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등 포함.

8)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한함.

상 속 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예외 규정 있음)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시 상속인 요건의 충족으로 간주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사후이행 의무’를 위반시 추징금을 포함한 상속세 재납부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시키고자 마련한 제도임.
 - 일례로,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 70억원 상당의 주식 80%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 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약 17억원의 증여세 감소

<표 2> 납부세액 비교

구분	일반적 증여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70억원
증여공제	△0.5억원	△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9.5억원	65억원
세율	50%(누진공제 4.6억)	10%(30억 초과분은 20%)
산출세액	30.15억원	10억원
신고세액 공제	△3.015억원	
자진납부 세액	27.135억원	10억원

- 국내 건설기업의 창업자 및 대주주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이들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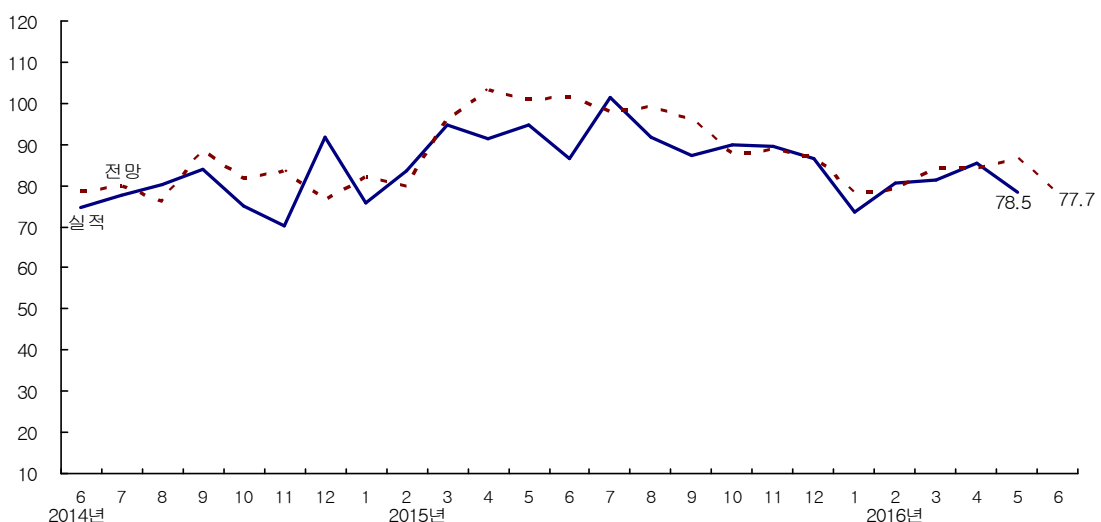
5월 CBSI, 전월 대비 7.1p 하락한 78.5

- 4개월 만에 하락,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 기록 -

■ 대형 건설기업이 하락 주도,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대형 업체의 부정적 시각 확산

- 2016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7.1p 하락한 78.5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2월 이후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3개월 동안 상승 폭은 12.1p에 그쳐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
 - 5월 들어 CBSI는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으며, 전월비 7.1p 하락은 지난 1월(13.2p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임.
 - 지수 자체도 78.5로 올 1월을 제외하면, 1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경기가 양호했던 작년 5월(94.6)에 비해서는 16.1p나 하락한 수치를 기록함.
 - 이는 2월 이후 3개월 연속 CBSI가 상승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대형 건설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된 결과로 판단됨.
 - 대형 건설기업 지수는 전월비 16.7p 하락해 5월 CBSI 하락을 주도했으며, 특히 대형 건설기업의 신규 주택공사 수주 지수가 전월비 25.0p 하락함.

<그림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대형 및 중소 기업 지수 하락, 중견 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CBSI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중견 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 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16.7p나 하락한 83.3으로 지난 2014년 1월 78.6을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그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했던 신규 주택 수주 지수가 전월 비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중견 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1.5p 상승한 85.3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5.6p 하락한 65.2를 기록함.

<표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5.6	78.5	86.5	77.7
구 모 별	대형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92.3	100.0	100.0	83.3	100.0	75.0
	중견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85.3	91.9	88.2
	중소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5.2	64.6	68.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6월 전망치, 5월 실적치 대비 0.8p 낮은 77.7

- 2016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0.8p 낮은 77.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6월에는 건설경기가 5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6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건설기업들이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임.
 - 5월 실적치가 매우 부진했고, 6월에는 공공공사 발주가 통상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6월 CBSI가 소폭 증가할 수도 있으나, 증가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

- 2016년 8월 12일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

■ 국내 공동 주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 실태는 후진적이고 주민간 갈등과 분쟁도 적지 않아,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임박

- 국민의 약 6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 거주 비중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도 연간 약 12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에 달함.
- 그러나 공동 주택 관리에 따른 입주자 간 거주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공동 주택간 품질 양극화, 세입자 비율의 증가, 입주자 간 상호 배려 약화, 공동체 의식 결여 등으로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갈등의 주요 원인을 보면, 하자보수 관련 이견, 층간 소음이나 애완동물 사육 등으로 인한 분쟁,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관리 주체와의 충돌 등이 많음.
 - 국내 공동 주택 관리의는 아직 물리적인 시설관리 위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동체 문화’ 형성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IT 기술과의 접목 등으로 공동 주택 관리 분야도 첨단 분야를 활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 주택의 노후화 진행에 체계적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2015. 8. 11)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016. 8. 12)을 앞두고, 공동 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서는 민원 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지원, 장기 수선계획 관련 지원, 분쟁 조정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사 연구 및 위탁 업무 등 지원 기구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 사례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관한 규정 내용

- 일본도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맨션’에서 발생하는 관리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생활상의 소음 및 애완동물 관리, 주차 불편, 균열이나 누수 등으로 분쟁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비용 부담 갈등도 심각한 편임.

- 이러한 맨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일본은 「맨션의 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2000. 12. 8. 제정, 2001. 8. 1. 시행)에서 국토교통성이 전문 조직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맨션관리센터’에서 상담이나 고충 처리, 관리조합(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에의 정보 제공이나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맨션관리센터는 1985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8월에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센터’로 지정되어 맨션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일본 내 8,478곳의 관리조합이 등록되어 있음.
 - 맨션관리조합의 상담 및 조사 연구와 정보 제공(미래넷 운영)을 비롯하여 맨션관리사 시험 주관기관이면서 맨션관리조합의 채무 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 기관은 전문성과 조직의 공익성을 갖춘 실질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서, 주택관리 종합지원 기능 필요

-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지원 기구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업무의 공정성 확보에도 주력해야 함.
- 지역 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과의 업무 협조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문제도 지원 기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층간 소음 등 공동 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지원 기구는 현재의 분쟁 조정 ‘지원 기능’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직접 담당’하는 종합 지원 기구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드론과 건설산업

- 인프라 분야에서 드론 기술이 대체 가능한 시장 규모는 452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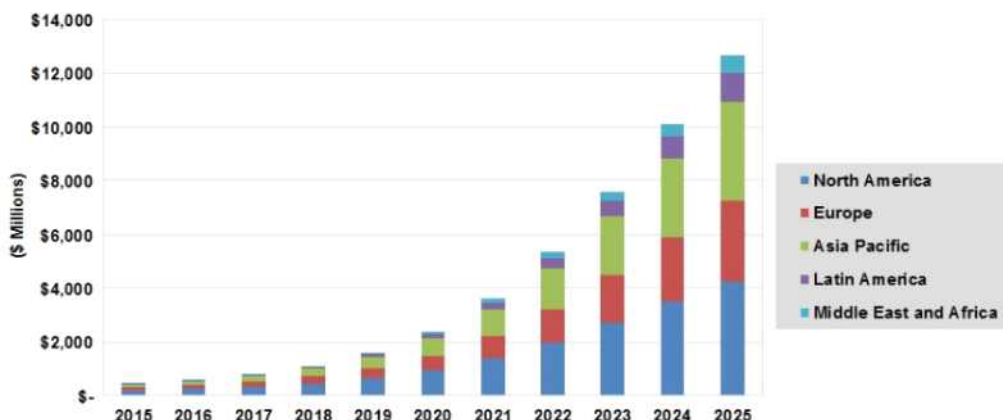
■ 다양한 종류의 드론, 주요 산업에서 활용 범위 점차 확대

- 1916년 Aerial Target Project를 통해 개발된 군사용 무인 항공기가 시작된 드론(drone)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물류산업의 경우 단순한 배송 방식 변화가 아닌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 시장 구조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 받음. 농업 분야도 노동력 부족 해결, 정보 수집 및 영농 가능 규모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드론은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및 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한 IT산업, 자연 재해 피해 규모 조사 및 손해액 산정 등 보험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 또한 토지 측량, 지도 제작, 송전선 파손 여부 점검 등의 측량 및 전력 산업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드론은 크기, 고도, 운용 목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 크기로는 25g의 초소형 드론부터 1만 2,000kg 무게의 초대형 드론까지 다양함. 고도별로는 3km 이하(저고도), 3~10km(중고도), 10km 이상(고고도)으로 분류되며, 운용 목적에 따라서는 정찰용, 전투용, 통신 중계용 등으로 구분함.

■ 2025년 상업용 드론산업 시장의 예상 규모는 127억 달러

- 글로벌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s)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53억 달러로 전체 항공시장의 1.1% 수준⁹⁾
 - 글로벌 무인기 시장은 2003~2012년까지 연평균 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까지 연간 10%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Tractica의 분석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commercial drone)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대륙별로 보면 미국과 아시아가 각각 42억 달러와 39억 달러로 드론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용도별로는 영상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2025년에는 약 51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상업용 드론 시장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며, 지도 제작 분야가 16억 달러로 뒤를 이을 것임.

9) Teal Group(2014). 2014 Market Profile and Forecast, World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그림1> 2025년 상업용 드론 예상 시장 규모¹⁰⁾

■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해 드론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분야

● 건설산업은 농업, 교통(물류) 분야 등과 더불어 드론 기술이 갖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음.

-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PwC는 드론 기술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시장 규모가 약 45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함.

<표1> 드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분야별 시장 규모¹¹⁾

(단위 : 십억 달러)

분야	인프라	교통	보험	방송	통신	농업	보안	광업	합계
금액	45.2	13.0	6.8	8.8	6.3	32.4	10.5	4.3	127.3

-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드론 기술 활용의 범위가 넓음. 설계 단계에서는 양질의 현장 관련 데이터 공급이 가능하고,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 상황 등을 포함한 실시간 정보 습득이 가능함.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유지 및 보수가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의 경우 인력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은 높은 비용과 작업 지연, 안전 사고 발생 등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드론을 활용한다면 인력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 및 높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 타 산업에 비해 드론 활용 범위가 넓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관련 기술 동향과 시장 확대에 필수적인 제도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10) Tractica(2015), <http://favoritedrones.com/2015/10/drone-market-grow-hit-8-billion-2025/>.

11) 시장별 규모는 2015년 기준 드론 기술을 통해 대체 할 수 있는 시장(인력)의 규모를 의미함. PwC(2016). Clarity from Above.

민자사업, 본연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건설산업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공이 주관하는 공공공사 입찰 문제와 공공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이 주도하는 민자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가지 분야다.

전자는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공급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만 하면 해결된다. 문제는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정성의 문제보다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공사비 절감 문제는 관리 및 감독하는 공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이 공급하던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는 민자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진국들이 민자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 및 행정 효율화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실현할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이 제공하던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를 민간이 조달하는 재원에 기초하여, 민간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조직을 크게 감축하고자 하는 민영화 방안이 바로 민자사업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인프라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자사업의 활성화 문제는 오래된 화두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수도 없이 발표되어 왔다. 그 중에서 최근에 문제로 대두된 것이 새로운 사업 방식의 도입(BTO^{RS}, BTO^A)이다. 사업 단위로 그저 선택만 하면 그만인 사업 방식인데, 선택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업 방식의 선택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해당 부처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임의 문제 때문에 민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제는 민자사업 본연의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사업 단위당 정부의 책임을 보조금 형태로 사전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공고하면 모든 문제는 민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약 과정에서 민간의 지분 투자가 선투입되고, 다음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자금이 투입되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조건만 협약에 명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민자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민자사업의 기본 원칙이다. 고민하지 말자. 이제는 민자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회귀할 때이다.

왕세종(연구위원 · sjwang@cerik.re.kr)